

이병기, 자수서에 '최경환에 1억 건네'

검찰, '2014년 10월' 전달 시점 주목... 대가성 의심·목적지 박 전 대통령 가능성도

이병기(70·구속) 전 국가정보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경환(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원장이 쓴 자수서엔 최 의원에게 돈을 건넨 시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뉴시스 취재 결과 이 전 원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최 의원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넸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이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최 의원에게 돈을 준 시점은 2014년 10월이라고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

또 이 전 원장은 '최 의원에게 돈을 줄 때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를 사용했다'고 자수서에서 진술했다.

특수공작사업비는 특수활동비에 반영된 국정원 예산으로, 용도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자금으로 알려졌다. 예기치 못한 특수 상황 발생해 국민 안전을 위해 긴급히 써야 하는 공작금 등 명목이어서 특수공작사업비는 주로 국정원장이 공적 업무를 볼 때 사용하는 자금으로 파악된다.

이 전 원장은 자수서에서 이런 일련의 과정은 이현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건의에 따라 이뤄졌고, 자신은 자금 지출을 승

인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원장에게 자수서를 받은 검찰은 최 의원에게 돈이 전달된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고, 국정원 특수활동비 등 예산 편성에 관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가성이 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의 목적지가 박근혜(65) 전 대통령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최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부정하게 사용한 특수활동비는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돈은 모두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로 파악됐다.

이 중 41억원 가량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고, 나머지 30억원의 사용처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이 전 원장이 최 의원에게 줬다는 1억원은 '용처불명'의 30억원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현재 본인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새벽 법원은 이 전 원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면했다. /뉴시스



"KBS 이사장 퇴진하라"

지난 17일 민족문제연구소 전북지부가 KBS전주방송총국 앞에서 KBS 이사장 퇴진과 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도의회 연구회, '도 공공외교 활성화' 세미나 개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로 구성된 외교정책활성화연구회(대표의원 정호영)는 17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공공외교 활성화'를 주제로 전문가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공공외교 전문가인 송기돈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최윤규 전북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각 '공공외교와 지방자치', '전라북도 공공외교 현황 및 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제 1발제자인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송기돈 교수는 오늘날 외교는 국가 간의 단에서 벌어지는 행위가 아닌 도시 간의 외교로 확대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도시외교의 관점에서 전라북도의 공공외교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제 2발제자인 전북연구원 최윤규 박사는 세계 다양한 국가들이 펼치고 있는 공공외교 사례를 분석해 국제적 공공외교의 흐름을 진단하고 이를 반영한 전라북도 공공외교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종합토론과 질의응답 시간에는 모든 참여자를 함께 전라북도 공공외교 발전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눴다.

연구대표 정호영 의원(김제1)은 "공공외교의 중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지만 전라북도의 공공외교는 제대로 걸음마조차 못 떴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외교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가 전라북도 공공외교가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외교정책활성화연구회'는 행정자치위원들을 주축으로 구성된 의원연구단체로 1년간 활동을 하며, 전라북도의 외교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례회, 세미나 등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김진성 기자

도의회 교육위, 수능 연기 긴급점검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장명식)는 17일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18학년도 수능 시험 연기에 따른 수험생 지원과 시험지 안전관리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교육위 의원들은 23일로 연기된 수능시험에 우선 수능 시험지 보관·보안 관리와 시험장 안전점검 실시, 수험생들의 마무리 공부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용모(전주8) 의원은 "갑작스런 수능 연기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후속 대책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수능시험에 수험생들이 흔들림 없이 임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연기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 혼란을 최소화하라"고 말했다.

최영규(익산4) 의원은 "수능 문답지 보관 장소에 대한 경비를 강화해야 하고, 수험생들의 컨디션 조절을 위해 도교육청의 차질없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특히, 재수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이들에 대한 안내를 펼치고 수험생들의 시험공부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조병서(부안2) 의원은 "학교 구조물 중 필로티(기둥건물) 구조의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면서 "또한, 수험생 가정학습, 시험장학교 안전진단, 수험생 심리적 안정과 수험표 보관으로 등으로 수험생이 차분하게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이번 포항 지진을 타산지석 삼아 지진이 발생했을 경우 즉각적인 후속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예를 들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방문해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라북도교육청 부교육감은 경찰의 지원과 교육부 중앙협력관 등 수시명이 3교대로 수능시험 문답지 관리에 집중하고, 각급 고등학교에서는 수험생들의 체계적인 마무리 공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진성 기자

이용호, 내년 개헌 대비 국민투표법 개정안 발의

현행 국민투표법 위헌 상태 해소... 재외국민투표 · 선상투표 · 사전투표 도입 등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17일 내년 개헌을 대비해 국민투표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투표법은 국가헌법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개정안의 최종 결정을 위해 실시되는 국민투표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 한 법이다.

현행법은 1989년 전부개정된 이후,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채 '옛날 법률'로 남아 있다.

게다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에 관한 규정이 없어 2014년 7월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받았고, 그동안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어 온 선상투표,

사전투표제도에 관한 조항도 없는 상태다. 현행법만으로는 내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 및 외국 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재외국민 투표제도 △ 선위를 위한 선상투표제도 △ 국민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투표인을 위한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고, △ 소품,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투표운동을 허용하도록 했으며, △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국민투표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각종 제도를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새롭게 마

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용호 의원은 "30년 전 법인데다 위헌 상태인 현행 국민투표법으로는 내년 개헌 과정에서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며, "투표권을 가진 국민 누구나 손쉽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국민투표법을 손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의 가장 큰 교훈은 현 헌정체제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며, "내년 개헌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는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기본권부터 국가제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모든 틀을 바꾸는 기점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조배숙 "안 통합강조 유감"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전날(16일) 대학 특강에서 바른정당과의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진주난봉가를 인용, "옛사람들이 말하길 화평정은 석달이요 본래정은 백년이라 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17일 오전 자신의 SNS 페이스북을 통해 "당내에는 더 이상 통합 논의는 없다는 식으로 비추고선 밖에서 다른 메시지를 내는 건 언당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유승민 대표의 예방 후 달라진 행보로 보인다"며 "안 대표의 바른정당과의 통합의지는 첫사랑 호남을 버리고 짝사랑 유승민을 선택하는 거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분명히 할 때가 됐다"며 "더 이상 모호한 태도로 당이나 안 대표나 소속의원들이나 유권자들을 기만하거나 호도해서는 안될 일"이라 덧붙였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치즈

벨기에 출신 지평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